

지속 가능한 발전 : 세계적 논의와 한국의 정책대안

권혁주 / 성균관 대학교 교수, 글로벌 거버넌스와 사회발전 연구센터 소장

I. 경제발전의 모순과 지속 가능한 발전

과학기술과 사회, 경제제도의 발전으로 세계인류는 유사 이래 경제적으로 가장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 간의 경제적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으며, 한 사회 안에서 불평등도 심화되고 있다. 지구의 자연환경 또한 끊임없이 파괴되어, 이렇다간 인류의 종말도 멀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는 그 모순을 해결하지 못하고 운명적인 파국에 이를 것이라는 마르크스의 모순론이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게 된다. 물론 마르크스가 말한 모순은 노동과 자본의 대립을 축으로 한 사회적 갈등이었고, 복지국가를 통해 자본주의 사회는 파국적 종말은 회피할 수 있었다(Baldwin 1990). 그러나 우리가 직면한 새로운 모순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동안 인류가 정복 대상으로 상대한 자연, 항상 거기에 있을 것으로 간주한

지구는 더 이상 우리의 파괴적 경제발전을 감내할 힘이 없어 보인다. 결국 자연과 인간의 모순으로 우리 인류는 비극적 종말을 맞게 될 것인가?

이러한 파국적 종말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경제운영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경제발전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 지속 가능한 발전론의 출발점이다. 특히 지속 가능한 발전론은 지구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혹은 최소화하는 새로운 방식의 경제발전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점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은 인류의 경제적 삶을 먼 장래에 까지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면서, 동시에 지구 생태체계(ecosystem)를 보호하는 경제발전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지속 가능한 발전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가? 이렇게 생태 및 환경경제적 시각에서 정의한 지속 가능한 발전론은 세계인류가 직면한 사회,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인가? 이러한 문제에 답하기 위해 이 글에서는 1980년대 이후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정책의제를 제기하고, 중요 정책결

정을 주도한 UN의 논의를 분석한 후, 지속 가능한 발전의 다양한 쟁점에 대해 세계적 논의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지속 가능한 발전의 측면에서 한국의 정책대안(policy alternatives)을 간단하게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일견 누구나 공감할 것 같은 지속 가능한 발전은 국가별, 사회계층별 이해상충으로 앞으로 전망이 불투명하며, 이에 대한 우리의 정책대응도 많은 연구와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다.

II. 지구 환경체제의 위험과 지속 가능한 발전

지속 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은 모순론(contradiction)이 '비극적 종말'을 의미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끊임없는 발전을 의미한다. 또한 모순론이 운명론을 강조한다면 지속 가능한 발전은 인간 주체성을 강조한다. 즉 인간의 주체적 노력으로 파국적 결과를 회피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꾀하자는 것이 지속 가능한 발전이지만, 다가오는 위기가 전제되어 있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은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어 왔지만, 이를 처음 세계적인 정책의제로 제기한 것은 '환경과 발전에 관한 세계위원회(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가 1987년 유엔에 제출한 Our Common Future 제하의 보고서였다. 노르웨이의 그로 부른틀란트(Gro Harlem Bruntland) 수상이 위원장으로 있던 이 위

원회는 환경오염 및 생태계 파괴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추구해온 경제발전의 방식과 정책결정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또한 효과적으로 환경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세계 각국의 긴밀한 협력과 공동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강조하였다(Bruntland Commission 1987).

브른틀란트 위원회라고도 불리는 이 위원회의 리포트는 1987년 UN 총회에 제출되어 유엔 회원국의 전폭적인지지 속에서 유엔총회의 승인을 받았으며, 유엔 총회는 회원국 정부에 환경보존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도록 촉구하였으며, 유엔 본부도 세계 모든 나라들이 협력하여 환경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UN 정책 프레임워크를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다(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1987). 브른틀란트 위원회의 활동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첫째 그 동안 외부효과로만 치부되던 환경오염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점에 대해 세계적 동의를 이끌어 냈다는 점이다. 둘째, 환경오염과 생태계의 파괴를 막기 위해서는 전세계적 공동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했다. 지금까지 환경문제는 오염이 발생하는 국가 및 인접 피해국가만이 당사자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세계의 모든 국가가 환경 파괴에 책임이 있으며, 그로 인한 피해를 받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아마존 열대 우림(rainforest)의 파괴자는 현지의 벌목기업, 개발기업과 해당국 정부뿐만 아니라, 북미와 유럽 등의 다국적 기업(multi-national corporations)과 부유한 소비자에서부터

햄버거를 좋아하는 어린이까지 모두 포함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구 북반구의 모든 국가에서 오랫동안 사용한 냉매인 프레온 가스로 인해 생긴 오존층 파괴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자는 남반구의 호주, 뉴질랜드 칠레의 국민이었던 것처럼 환경문제에 있어서는 지구는 하나의 공동체이다.

셋째, 유엔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그 위상을 한층 강화시켰다는 점이다. 유엔은 냉전 시대에는 미소간의 대립으로 인해 정치분야에서는 고착상태에 있었으며, 경제발전 분야에서는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과 세계은행(World Bank)의 자금력에 밀려 주변적 위치에 머물고 있었다. 그러나 환경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강대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특히 지구의 허파인 열대 우림의 대부분을 갖고 있는 국가들이 라틴 아메리카, 동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인 점을 감안한다면 군사, 정치, 경제적으로 약하지만 환경문제의 열쇠를 쥐고 있는 개발도상국의 참여는 핵심적 조건이다. 자연히 세계의 다양한 국가들을 한 자리에 모아 실질적인 정책결정과 집행의 방안을 모색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최적임자는 유엔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결국 브룬틀란트 보고서는 매우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전 세계가 환경문제에 커다란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였고, 유엔은 1992년 브라질의 리오 데 자네이로(Rio de Janeiro)에서 ‘환경과 발전에 관한 유엔 컨퍼런스(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를 개최하기에

이른다. 이 자리에는 170 여개 국의 유엔 회원국가의 정상들과 유엔 및 국제기구의 정책담당자, 시민사회 대표자, 다국적 기업의 최고경영자들이 모여,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가 되었다.

이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다양한 정책적 입장을 제시하고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러한 대규모의 국제회의는 참석자들의 다양한 세계관과 경제적 이해관계로 인해 매우 추상적인 수준에서 선언적 결론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리오 정상회담에서 유엔은 매우 구체적인 정책프로그램을 제시하는 데 성공하였다. 리오 정상회의가 발표한 ‘환경과 발전에 관한 리오 선언(Rio Declarat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은 소위 ‘정책의 제 21 (Agenda 21)’을 구체화하여 향후의 정책방향과 프로그램을 제시한 것이었다(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1992).

정책의제 21은 크게 세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밀림보호에 관한 원칙(Statement of the Principles of Forest)이며, 둘째는 종의 다양성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이다. 이 두 가지 협약은 밀림과 그곳에 서식하는 다양한 생물보호라는 측면에서 서로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 셋째 프로그램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책협의 기제(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에 관한 것이다. 리오 회의는 환경변화에 대한 정책적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지만 시간을 갖고 기후의 변화에 관한 구체적인 협약을 맺기 위한 정책기제를 마련한 것이었다. 여기서 처음 두 가지 정책 프로그램과 셋째 프로그램

이 갖는 중요한 차이를 지적해야 할 것이다. 처음 두 가지의 정책 프로그램은 법적으로는 강제성이 없으나 도덕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정책이라면, 셋째 기후 변화에 관한 정책협의 기제는 법적 강제력이 있는 다자간 조약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Gulbrandsen 2003). 물론 법적 강제력을 갖는다고 반드시 효과적으로 정책목표를 달성한다는 법은 없으나, 지구 기후 변화에 대해 세계 모든 국가가 구체적 정책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었다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이산화탄소로 인한 온실효과 (green house effect)와 그로 인한 지구기후 변화를 주장하는 이론은 지금까지도 논쟁의 대상이 되는 이론이다. 다양한 과학적 연구들이 온실효과나 기후 변화를 증명하고 있지만, 이에 못지않게 반박하는 연구들도 발표되고 있다. 그 중요한 쟁점의 하나는 기후변화가 존재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 변화가 인간이 발생시킨 이산화탄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장기간의 주기를 두고 지구의 기후가 변화하는 과정일 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 변화를 막기 위해 어떠한 정책적 개입을 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그 동안 무기력함을 보여 왔던 유엔의 주도로 세계 모든 국가에게 법적 강제력을 갖는 협약을 창출하기 위한 정책기제(UN Framework)가 출범했다는 것도 매우 획기적인 일이었다. 이 정책기제는 지난 10여 년간의 협상을 거치면서 최근 발효된 교토 의정서 (Kyoto Protocol)를 통해 실제인 강제력을 갖는 다자간 조약으로 제도화 되었다. 교토 의정서는 마지막 관문이었던 러시아가 2004년 11월 조약을 비준하면서 2005년부터 법적 효력을 갖게 되었고, 참가국들은

2007년까지 일 단계 배기가스 감축노력을 시작하여, 2008년에서 2012년까지 1990년 기준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5.2%를 축소시켜야한다. 이렇게 볼 때 1987년 시작된 지속 가능한 발전론은 매우 구체적인 정책 결과(policy output)로 귀결되었으며, 앞으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기후에 악영향을 끼치는 다양한 온실가스를 축소하는가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Ⅲ. 지속 가능한 발전론의 패러독스

이러한 정책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론에 대한 많은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비판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발전의 패러독스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비판이었다 (Barraclough 2001). 첫째 지속 가능한 발전은 서구 선진국의 도시중산층의 정치적 의제로서 개발도상국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비판이다. 서구 중산층이 낭만적으로 바라보는 생태체계 보호를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과 가난과 기근 등이 심각한 경제문제에 봉착한 개발도상국이 바라보는 지속 가능한 발전은 전혀 다른 것이라는 시각이다 (Barraclough 2001). 더 나아가 선진국이 주장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은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교묘한 무역보호 정책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Griffin 2003). 예를 들어 열대 우림에서 생산된 가구의 수입금지는 겉으로는 환경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개발도상국의 수입품에 대한 선진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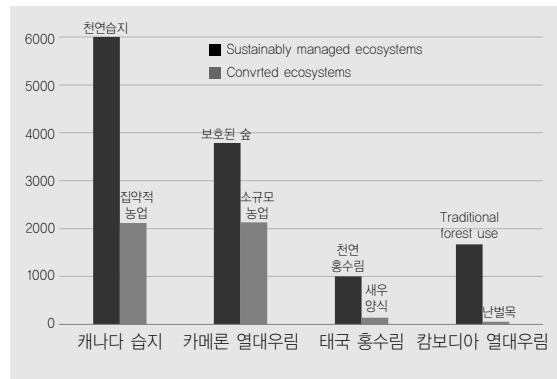
시각에서 많은 개발도상국 정부들은 지속 가능한 발전은 단순한 환경문제로서가 아니라 환경과 인간의 삶을 향상시켜주는 경제, 사회발전의 논리로서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한편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은 그 자체로서 가난과 빈곤에 고통을 받고 있는 개발도상국가의 사람들에게 보다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지는 못한다. 그것은 많은 개발도상국가에서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심각한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적, 경제적 체제로 인해 경제가 성장한다 하여도 그 혜택이 모든 시민들에게 고르게 돌아가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지속 가능한 발전론이 누구에게나 공감받을 수 있는 주장으로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환경과 생태체계 보호, 그리고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에만 관한 정책 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에 대해서도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세계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지속 가능한 발전론에 포함시켜 생각한다면, 지속 가능한 발전이 뚜렷한 의미가 퇴색되고 정책적 중요성도 상실될 위험이 있다.

그런데 환경과 생태체계를 중심으로 고찰해도 지속 가능한 발전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불평등을 더욱 공고화하는 측면이 있다. 첫째, 지속 가능한 발전을 논하면서 줄곧 제기되어온 주장으로 환경파괴의 역사적 책임을 이러한 측면에서 제시할 수 있다. 지난 4세기 동안 경제발전을 통해 이미 선진국에 도달한 유럽과 북미 등의 선진국은 그 과정에서 이미 환경과 생태계에 대한 파괴를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 과정을 무시한 채 현재의 상태에서 환경보호를

주장한다면 결과적으로 이미 선진국에 도달한 국가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둘째, 현재 상태에서도 일인 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소득수준에 비례한다. 예를 들어 1인당 국민소득(GNI)이 40,000불이 넘는 미국 시민은 100불에 못 미치는 이디오피아의 국민에 비해 100배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욱이 미국은 교토 의정서에도 가입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개발도상국 국민에게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보호를 하고, 그에 따른 경제적 희생을 감수하라는 논리는 말 그대로 지속 가능한 발전론의 패러독스에 불과하다.

〈그림 1. 헥타르 당 달러의 순현재가치〉



셋째, 이러한 책임의 불평등에 더불어 지속 가능한 발전 정책이 주는 혜택의 불균형도 지적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지속 가능한 발전론에 따라 환경과 생태체계를 보호했을 때, 거기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혜택도 선진국에게 집중적으로 돌아간다. 〈그림 1〉은 캐나다, 카메룬, 태국, 그리고 캄보디아의 습지, 열대 우림 등을 개발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생태체계를 유지하면서 그대로 둔 경우의 경제적 가치와 경작 등의 경제

적 이용을 위해 개발했을 경우에 얻어지는 경제적 가치를 비교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캐나다의 습지가 가장 큰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Millennium Ecosystem Assessment 2005).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러한 가치를 평가하는데 사용한 방법론이다. 즉 습지나 밀림의 실질적인 구매가격이 아니고 그로부터 혜택을 받는 시민들이 그것의 가치를 얼마나 평가하는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캐나다의 시민들이 지속 가능한 생태체계를 유지하는 습지의 가치를 가장 높이 평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민들의 의식은 곧 경제적 가치인 것이다. 우리가 어떤 상품을 높은 가격에 구매하는 것은 그것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속 가능한 생태체계를 유지하면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경제적 부를 창출한다면, 이 같은 계획이 가장 높은 실현 가능성을 갖는 것도 습지의 가치를 가장 높이 평가하는 캐나다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해 다양한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1990년대 말에 이르러 많은 개발도상국, 국제기구, 시민환경단체 등을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방향전환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방향전환의 한 정점이 된 것이 2002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개최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이다. 조하네스버그 정상회의(Johannesburg Summit)로도 불리는 이 회의는 리오 회의의 2차회의의 성격을 갖지만, 한편으로 리오 회의에서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선정한 환경과 생태체계의 보호로부터 개발도상국의 경제와 사회발전이라는 정책과제로 지속 가

능한 발전론의 정책적 관심이 옮겨가는 과정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던 계기가 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 빈곤퇴치가 지속 가능한 발전의 열쇠임을 천명하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는 개발도상국 빈민의 식수와 생활 하수의 위생적 공급 및 처리를 설정했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농민들의 경작의 권리도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핵심임을 인정하였다. 이는 지속 가능한 발전론의 일대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IV.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회의론과 낙관론

이러한 지속 가능한 발전론의 방향전환으로 그 핵심내용이 환경, 생태체계 보호정책과 개발도상국의 경제, 사회개발 정책으로 확대되었다. 이렇게 보면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지속 가능한 발전이 더 이상 뚜렷한 의미나 명확한 정책방향을 갖고 있는가 하는 회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필자는 환경 및 생태계의 파괴의 원인이 원천적으로는 경제적 기원에 있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발전론이 경제발전, 빈곤퇴치 등의 문제를 중요한 정책과제로 설정하는 것은 오히려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많은 개발도상국의 시민들이 최소한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 자원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고, 삶을 영위하기 위한수단으로서 자연적 재원을 이용한다고 보면, 이와 같은 경제적 과제를 지속 가능한 발전론에 포함시키는 것은 보다 적실성 있는 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오히려 이러한 방향 전환보다 지속 가능한 발전에 많은 사람들이 회의론을 제기하는 것은 미국이 교토 의정서에 가입을 거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은 일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및 전체 배출량에서 세계 최고의 환경오염 국가이다. 그러나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경제적 손실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많은 논평가들은 미국의 참여없는 교토의정서는 결국 실패로 돌아갈 것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 정책도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릴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이러한 회의론에 대해 필자는 세 가지 측면에서 낙관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미국의 시민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지속 가능한 발전에 커다란 관심을 갖고 있으며, 교토 의정서가 효과적으로 집행되어 나가면서 미국 시민들이 이를 수용한다면 미국 정부의 태도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지속 가능한 발전은 앞으로 미국 여론이라는 시험대를 통과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비관적이지는 않다.¹⁾

둘째, 세계가 환경이나 생태계와 같은 정책분야에서 법적 강제력을 갖는 정책기제를 발전시켜 가면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획기적인 일이다. 특히 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의 유럽연합 국가들은 지속 가능한 발전에 매우 적극적인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기제가 쉽게 좌초되지는 않을 것을 판단된다. 보다 현실적

인 정책집행 기제로 최근 논의되고 시험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온실가스 구매제도(Greenhouse Gas Market), 환경기술 이전제도(Clean Development Mechanism) 등은 정책적으로도 참신한 것으로 앞으로 더욱 정교히 개발될 것으로 예상된다(Jotzo 2005).

온실가스 구매제도는 2012년 이후부터 목표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달성하지 못한 국가들은 교토 의정서에 따라 이러한 목표를 달성한 국가들로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을 구매해야 한다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국가들은 벌금을 내는 것으로 무임승차자(free-rider)를 없애고, 성실히 노력하는 국가에게 경제적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정해진 개발도상국들은 상당 기간 이러한 벌과금에서 면제된다.

환경기술 이전제도는 선진국 등이 자국에서 감축해야 하는 온실가스량을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개발도상국에게 유, 무상의 기술 및 자본이전을 통해 해당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을 축소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축소한 것으로 본다는 제도이다. 이는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배출의무를 완화하면서도 해당 국가의 환경상태를 개선하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제도들이 앞으로 얼마나 성공을 거둘 것인가는 두고 볼 일지만, 지속 가능한 발전론이 보다 정교한 정책수단을 통해 현실화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자연의 놀라운 복원력이다. 인간이 좀 더 노

1) 2005년 12월 9일 막을 내린 몬트리알 UN 환경회의에서 미국은 결론을 전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토협상에 계속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다.

력하여 적극적으로 환경과 생태체계의 보호를 한다면 자연은 기대한 것 이상의 힘으로 복원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 세계가 오존 층 파괴를 막기 위해 프레온 가스의 사용을 금지하고 배출량을 최대한 줄인 결과 오존층은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다. 가까운 예로 우리나라 난지도 쓰레기 처리장이 시민이 사랑하는 공원으로 변화되기도 하였다. 이렇듯 자연이 빠른 복원력을 보여줌으로 인해 우리의 지속 가능한 발전 노력도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같은 빠른 복원력이 항상 가능하리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도 인식해야 할 것이다.

V. 한국의 정책대응 방안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해 우리나라도 커다란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교토 의정서에도 비준을 하였고, 이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노력을 이미 시작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 직속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위원회를 출범시키어 정부 내의 정책적 조율과 정책개발에 노력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그대로 지속 가능한 발전에 순기능적 결과를 창출한다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들이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상충되기 때문이다. 경제성장을 양보하면서 환경과 생태계 보호를 위한 정책을 줄기차게 실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정부의 정책은 적당한 체면치레 용으로 그치게 될지도 모른다.

- 부가 설명 -

이산화탄소로 인한 온실효과 (green house effect) 와 그로 인한 지구기후 변화를 주장하는 이론은 지금까지도 논쟁의 대상이 되는 이론이다. 다양한 과학적 연구들이 온실효과나 기후 변화를 증명하고 있지만, 이에 못지않게 반박하는 연구들도 발표되고 있다. 그 중요한 쟁점의 하나는 기후변화가 존재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 변화가 인간이 발생시킨 이산화탄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장기간의 주기를 두고 지구의 기후가 변화하는 과정일 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 변화를 막기 위해 어떠한 정책적 개입을 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여기서 무조건 지속 가능한 발전만을 주장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음도 지적하고자 한다. 세계적 논의 과정에서도 환경과 생태 문제와 더불어 경제, 사회발전의 과제가 지속 가능한 발전론의 중요의제로 설정된 것을 감안하면, 우리의 정책적 과제도 지속 가능한 발전 정책 속에 환경과 생태계 보호와 경제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수단을 개발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지속 가능한 발전의 세계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우리의 국제적 책임을 다하는 노력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 나라는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많은 개발도상국의 발전모델로 여겨지고 있지만, 또한 환경오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나라로 인식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 국제사회의 환경보

호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동시에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환경보호에도 많은 관심과 구체적인 정책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특히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온실가스 구매제도, 환경기술이전 제도는 환경 기술이 경제정책 측면에서도 우리나라에게 많은 혜택을 가져다 줄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우리가 환경기술을 개발하여 몽고에서 발생하는 황사현상을 막는다면, 우리나라가 매년 겪는 황사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온실가스 배출 노력에도 신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여지를 얻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경제적으로 매우 큰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것은 한 예에 불과한 것이지만 교토 의정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이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정책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라고 생각한다. 또한 이러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계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여 성숙한 국가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것은 경제적 이해득실을 넘어 후손들에게 살만한 지구를 넘겨주어야 하는 우리의 의무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 Baldwin, P. (1990). The politics of social solidarity: class bases of the European welfare state, 1875~1975,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England]; New York.
- Barraclough, S. L. (2001). "Toward Integrate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UNRISD, Geneva.
- Brundtland Commission. (1987). Our Common Future,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 Griffin, K. (2003). "Economic Globalization and Institutions of Global Governance." Development and Change, 34(5), 789~807.
- Gulbrandsen, L. (2003). "The Evolving forest Regime and Domestic Actors: Strategic or Normative Adaptation?" Environment and Politics, 12(2), 95~114.
- Jotzo, F. (2005). "Developing Countries and Future of Kyoto Protocol." Global Change, Peace & Security, 17(1), 77~86.
- Millennium Ecosystem Assessment. (2005). Living Beyond our Means: Natural Assets and Human Well-Being, Millennium Ecosystem Assessment, Penang.
-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1992). "Rio Declarat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United Nations, New York.
-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1987). "Resolution 42/187." New York.